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 지난 1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진행한 고용동향 점검회의 후속조치 일환, 5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 고용위기 징후 동향 점검 및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던 “고용동향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19.(월) 권창준 차관 주재로 5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산업계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고용동향 및 정부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정현황) ▲여수·광주 광산구('25.8.28.~'26.2.27.), ▲포항·서산('25.11.21.~'26.5.20.)
▲울산 남구('26.1.12.~'26.7.11.)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 업종 밀집 지역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상황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건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450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안내를 마쳤으며, 2월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2026년에는 고용둔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단체 지원 예산 450억 원을 통해 고용불안이 있는 지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수렴된 현장의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가 없도록 고용위기 우려 지역의 일자리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 일정

- 2026. 1. 19.(월) 16:00~17:30 / 세종청사 6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우리부: 12명) 차관(주재), 고용정책실장,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관할 지방청장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우대지원사업 소관 실·국장 등
- (관계자: 12명)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또는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지역인자위 고용전문관, 산업·고용전문가
* 지정지역: ▲여수, ▲광주 광산구, ▲서산, ▲포항, ▲울산 남구

□ 주요내용

-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동향 및 지원현황(노동시장정책관)
- ② 석유화학·철강 업종 동향 및 고용영향(산업·고용전문가)
- ③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현장관계자)

□ 세부일정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6:00~16:05	5'	개회 및 모두 발언	차관
16:05~16:15	10'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동향 및 지원현황	노동시장정책관
16:15~16:35	20'	석유화학·철강 업종 동향 및 고용영향	산업 협·단체 고용전문가
16:35~17:25	50'	자유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청취	-
17:25~17:30	5'	마무리 말씀	차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신
5개 자치단체, 산업부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공급과잉,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업황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산업의 위기가
단순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용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불안정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사업 추진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기업의 경영 회복과 근로자의 고용 유지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인지,
정부 대책이 현장과 괴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건의해주시는 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현장에 바로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